

400만 농민은 정녕 국가 경제발전의 역적일 수밖에 없는가?

- 한-칠레 FTA 비준 저지를 둘러싼 중앙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

“권력과 자본”의 양지만을 쫓는 한국 언론

흔히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 3대 권력기관을 능가하며 이른바 “제4부”라 불리기까지 한다. 특히 막강한 자본력과 조직망을 통해 “독자(시청자)들이 보아야 할 것”과 “독자(시청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을 제시하며 독자(시청자)들의 의식을 강력히 지배하는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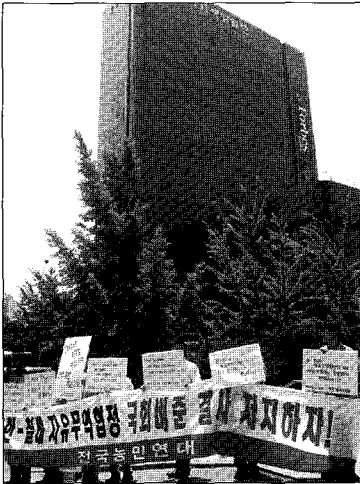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전으로 신문·방송 중심의 여론 형성구조에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등 “언론재벌”들이 중심이 된 독과점적인 여론 유통·형성구조는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있어 양심있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보수언론들은, 보수 강경론자들과 일부 재벌 중심의 편향된 입장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옹호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와 농민 등 소외계층들이 투쟁을 일으킨 근본원인과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노

동자와 농민들은 “대외개방 및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경제역적”으로서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파괴적 집단으로 윤색되고 낙인찍히고 있다. 보수 강경론자와 재벌 세력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된 “힘과 권력을 내세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계속 되면서 소외계층인 노동자·농민들의 목소리가 억눌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의 지면에 비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은, “벤처농업의 가능성” 혹은 “시장 개방에도 끄떡없는 신상품 개발” 같이 신문 지상에 화려하게 포장·왜곡되어 철저히 가려지고 있다. 반면 농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은 “고속도로 불법 점거 시위로 곳곳에서 정체” 등과 같은 기사로 유통되면서 사태의 본질이 가리고 왜곡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농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농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건전한 여론 조성을 방해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기본적 사명마저도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과 자본”의 양지만을 쫓으며 위기의 한국 농업의 목을 죄고 있는 게 한국 보수언론들이 만



◀ 한농연은 지난 6월 2일 서울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반농민적 언론보도에 대해 전국농민연대 차원에서 기습적인 항의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들어 내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400만 농민, 언론의 “마녀사냥” 표적으로 전락하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6월 11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유예를 결정한 전후로, 400만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한 언론들의 “마녀사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칠레 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끝장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400만 농민의 생존권과 민족 식량주권은 대외 신인도 개선과 중남미시장 진출을 명분으로 땅바닥에 처참히 내버려졌다. 시장개방을 하지 못해서, 핸드폰과 자동차를 팔지 못해서 큰 문제라는 식의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반농업 개방론자들의 억지 주장만 지면을 가득 채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는 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로서는 첫 FTA인 한·칠레협정을 국회가 무산시킬 경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 한국과 자유무역을 추진할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한·칠레 FTA 비준 연기 - 총선 의식 개방정책 휘청, 매일경제, 2003. 6. 12)

➔ 정부와 민주당은 이익단체의 집단행동 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아야 한다. 대책을 세운 뒤 비준할 게 아니라, 비준을 해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FTA 비준연기 잘못됐다, 한국일보 사설, 2003. 6. 13)

➔ 칠레와의 FTA를 제때에 비준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국가와의 FTA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방형 통상국가,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략) 만약 비준이 거부될 경우, 우리 국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FTA 협정을 거부한 세계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칠레 FTA 비준 급하다, 중앙일보 시론,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03. 6. 23)

한-칠레 FTA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온 한농연 및 농민단체의 입장이나, 허울뿐인 정부의 “선대책-후비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다만 “FTA 비준 없이는 경제성장은 없다” “FTA 비준 실패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식의 대국민 협박의 목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FTA 추진은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내 일부 경제부처와 재계 등의 이익

만을 위해 추진되느냐, 혹은 농업 등 취약한 경제 주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추진이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한-칠레 FTA의 경우 “대의개방 의지 천명”이란 명분을 제외하고 농업 및 농업외 분야의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졸속 협정이다. 오히려 칠레 과실류의 수입이 급증하여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 증가마저 우려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협상 초기부터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마저 외면하며 근거에도 없는 경제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FTA 비준 필요성을 강변하는 보수언론의 외고집은, 협상 시작 당시인 1998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농업 분야의 막대한 예상 피해액에 대한 수출기업 차원의 분담금 지원에 대해서도 알레르기적 거부반응으로 일관하는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워 왔다. 정부 및 재벌 편향적인 관점으로 일부 재벌들의 이윤극대화에만 충실히 복무하는 편향된 “나팔수”, 이것이 오늘날 우리 보수언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400만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는 어디로?

2001년 3월 18일, 조선일보는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 무산위기”라는 사설에서 농민단체들의 한-칠레 FTA 반대 움직임을 “점잖은 어투(???)”로 꾸짖었다. 정부 당국의 철저한 정보 차단과 협상 참여 봉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칠레와의 FTA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노력은 아랑곳 않는 전형적인 “언어폭력”이었던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왜곡시키고서는 “아님 말구” 식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의 언어폭력에 대해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 우리나라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공산품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임은 협상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 관련 단체들은 협상 초기에 그런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어야 했고, 정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 조선일보 사설, 2001. 3. 18)

정부가 선전하는 화려한 한-칠레 FTA 비준 이후의 장밋빛 미래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400만 농민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가부채와 농산물값 하락 등 무분별한 농업개방 속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의 6월 20일 상경 투쟁은 “국가 기간교통망인 고속도로를 마비시킨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매도당하고,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현실마저도 정부 내 일부 경제외교 부처와 보수 언론들이 주축이 된 언론플레이로 인해 왜곡·날조되고 있다. 한-칠레 FTA의 비준 강행을 위해서라면 “한국 농민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은 농업보조를 받고 있는 것”처럼 4천7백만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이쯤 되면 400만 농민들은 보수언론이 선사한 팔자에도 없는 “귀족 농업인(???)” 대접(???)을 융숭하게 받고 있는 셈이다.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펴낸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 투입한 총 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5%인 26조8,3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GDP의 1.2%)보다도 4배 가량 많은 것이다. (중략) OECD는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기준으로는 36원에 불과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1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나머지 64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농민들을 위해 부담한 암묵적인 세금(Implicity Tax)이라고 분석했다. (농업부담 OECD 중 최고, 한국일보 경제면 머릿기사, 2003. 6. 13)

400만 농민들은 경제역적·집단이기주의자???

이같은 보수언론의 “농업 죽이기”식 보도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각종 보도물이나 사설·해설·의견기사 등의 편파·외곡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늦어져 농외부문 산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피해가 막심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는 것은 기본이다.



◀ 특히 중앙일보의 논조는 그 정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각계 농민단체들로부터 강한 규탄을 받았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정부 및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작년 대비 한국 기업의 대 칠레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품질경쟁력 향상·영업망 확충 등 자구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마저 보수언론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칠레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아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교역여건인 일본 자동차의 칠레 시장점유율 1위 고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잘 되면 재벌탓, 못 되면 농민탓”으로 돌리면서 “농업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한다”며 칭얼낼 것인가?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티아고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이 올 1 4월 중 칠레에 수출한 자동차는 5천54대(8천9백20만달러)로 일본(1만1천2백62대) 아르헨티나(5천8백11대) 브라질(5천6백10대) 프랑스(5천77대)에 이어 시장점유율 5위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일본에 이어 2위였으나 1년 만에 세 단계나 미끄러진 것이다.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급락한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지난해 10월부터 칠레와 무관세협정을 시행한 데다 올 2월에는 칠레 유럽연합(EU)간 FTA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산티아고지점 관계자는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는 업체와 7%를 무는 업체는 경쟁이 안된다”며 “한 칠레 간 FTA가 하루빨리 시행되지 않는다면 칠레시장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韓 칠레 자유무역협정 표류 와중에 칠레서 한국제품 밀린다, 중앙일보, 2003. 6. 14)



▲ 수구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를 손꼽고 있으며, 이번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대한 왜곡·편파보도에도 가장 앞장 서서 보도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노무현 정부 들어 워낙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전문가 들은 농산물이나 스크린 쿼터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발 나에게 묻지 말아 달라”며 코멘트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사회 각층의 쇄국주의 성향은 구한말을 연상케 할 만큼 짙게 막혀 있다”며 “이런 때 말을 잘못했다가는 나만 다친다”며 언급을 피했다. (‘日·中 능가하는 개방 안되면 동북아 중심 커녕 3流 전략’, 매일경제신문, 2003. 6. 14)

연일 계속되는 반농업언론들의 “아님 말구”식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한-칠레 FTA 비준 거부 운동 및 농권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마저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전농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서 발췌한 아래의 글은, 농업계의 한-칠레 FTA 반대 상경투쟁에 분노한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비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외 개방정책 및 농업희생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충실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내다버린 보수언론들이 자초한 전형적인 국론분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산 쌀을 사먹고도 아무 말 않고, 농약가득한 과일, 채소를 먹고도 아무 말 않는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이번 당신네들의 만행을 이해해 줄까? 이것은 애국이나 식량안보 뭐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번 고속도로 점거를, 시위와는 무관한 농민 집단이기 주의이며 범죄 행위로 보고 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전국에 산재한 농민들을 위해 세금 엄청 바치고 있다. (전농 민족민주계서판, 2003. 6)

반농업 보수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한농연을 포함한 전국농민연대 9개 단체는, 6월 2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보수언론들의 이와 같은 반농업적 여론조작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한농연은 6월 13일 한국일보의 “OECD 농업정책평가서” 관련 편파·왜곡보도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교통상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명확한 사실 해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 일부부처와 보수언론들은, 이같은 농업계의 일관된 항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아님 말구”식 “농업죽이기” 기사로 일관하면서 400만 농민과 12만 한농연 회원들의 농심을 철저히 짓밟고 4천 7백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이 유예된 한-칠레 FTA를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및 정부 내 일부부처들의 언론 플레이와 국회의원 설득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

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한-칠레 FTA 비준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상자기사 참조).

이 속에서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의 충실한 나팔수 노릇으로만 일관하는 보수언론들의 편파·왜곡 보도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칠레 FTA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한농연 및 농업계의 건설적인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한농연은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한-칠레 FTA 비준 저지와 함께, 보수언론들의 “농업죽이기” 보도행태를 근본적으로 타

파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 줄의 편파·왜곡기사를 가지고 4천 7백만 국민들을 일순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7천만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과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임을 보수언론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졸속·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며 4천7백만 국민을 속이고 400만 농민과 7천만 민족농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은 한-칠레 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그 실제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농연 및 전 농업계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

(참고) 한국일보 {OECD 회원국 농업정책평가서}
편파·왜곡보도 관련 외교통상부 항의 공문 답신 결과

한농연은 지난 6월 13일 한국일보가 「OECD 회원국 농업정책평가서」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한국 농민들이 지난해 26조 8,37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측의 책임있는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6일자 공문(경기 26940-688)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공문에 실린 해명 내용의 골자.

- 2003년 6월 13일 한국일보의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보도 관련, 외교통상부는 국내언론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
- 2003년 「OECD 농업정책평가보고서」의 내용은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동 기사 내용에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한국일보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 2003년 OECD 농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 홈페이지와 OECD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